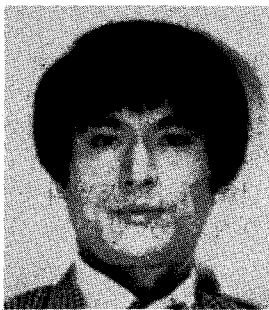


환경보호와 개발은 대립개념이 아니다



金東權

(매일경제신문·사회부기자)

이분법적 사고의 발상은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

인간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한다. 그것은 단지 욕구의 차원을 넘은 본능에 가까운 행동양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환경보다는 편안하고 편리한 환경을 선호하는 또하나의 본능적 욕구가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본능을 앞지르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환경은 그 순수성을 파괴 당하게 된다.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망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다. 맑은 시냇물, 푸른 천연림, 깨끗한 공기는 더러운 하천, 황무지, 희뿌연 스모그로 변모했고, 그위에는 각종건물과 공장·주택등이 들어섰다.

어떻게 보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욕망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려는 차원의 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과 개발을 대립의 적대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그 발상자체가 위험하기 그지없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발상은 마치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환경보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택할 것이냐 하는 질문은 아주 우매하기 짝이 없다.

사실상 인류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어쩔수 없이 환경파괴와 공해라는 달갑지 않은 부산물을 낳았다.

산업화의 초기 단계, 특히 18·19세기의 유럽에서는 오직 개발에만 전념했을뿐 공해방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더욱이 20세기 들어서도 이같은 추세는 가속화돼 일부지역의 공해는 상당히 중병의 단계에까지 와 있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발달과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이같은 개발을 우리는 환경을 파괴했다는 이유로만 크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세의 농경문화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세계를 누비는 자동차와 공장의 생산설비를 공해의 원인이 되니 모두다 파괴해야 한다는 소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와 보완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논리의 전개가 일부 환경보호론자들에게 의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합리화하려는 계

“
**정부는 형식적인 처벌을 내세운
 단속에 앞서 기업이나 업소들이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

아니냐는 지탄을 받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숙명을 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극에 달한 교통난과 주택난 등은 금수강산을 당초 생긴 그대로의 모습으로 간직하는 것을 무척 힘들게 만들고 있다.

곳곳의 산과 들이 파헤쳐져 택지로 변모하고 대단위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골재 채취를 이유로 수도권 상수원이 침해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살자는 뜻에서 비롯된 일이다.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도시의 지옥같은 교통난을 완화하자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조화와 균형이다. 절대적인 필요성이 대두돼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그로 인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면 우리는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기에 앞서 환경의 파괴정도를 극소화하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면
 파괴 정도의 극소화에 초점 맞춰야**

그러나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될, 말하자면 명분이 별로 없는 개발사업은 백지화 및 전면보류도 생각해 볼직하다.

예를 들어 설악산등의 국립공원 지역에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는 콘도나 가두리 양식장, 천혜의 산록을 침식해 들어가는 골프장등은 개발의 명분보다는 환경파괴의 우려가 더 설득력있게 들린다.

결국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자는 뜻도 깨끗함과 함께 편리함도 추구하자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다.

혹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무조건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실을 망각한 구두선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와는 별도의 얘기지만 정부의 환경정책도 이제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환경정책과 사업은 고작해야 대국민 캠페인, 공해배출업소 단속, 몇 개 되지 않는 매립지나 오·폐수처리장의 설치등에 그쳐 왔다.

모두가 미봉책으로 일괄해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환경을 제대로 보전하려면 보다 종합적이고도 거시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형식적인 처벌을 내세운 단속에 앞서 기업이나 업소들이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설치자금지원도 더욱 확대해 줘야 할 것이다.

또 대규모 위생 매립지와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 이를 점진적으로 크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

버릴 곳이 없는 쓰레기는 아무리 계몽운동을 하고 단속을 한다해도 결국 아무데나 버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당국도 환경분야에 대한 지원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보전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자각,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도 편리하게 살자는 개발작업과 멋지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